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ISSUE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11.17 vol.163

www.jthink.kr

연구진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실장

ISSUE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11.17 vol.163

CONTENTS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1.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04
2. 국민연금 데이터 관리 현황	05
3. 공적연금 현황	05
4.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06
5. 국민연금 데이터로 무엇이 가능한가?	07
6.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위한 전제조건	11
7. 정책적 제언	12



발행인 이강진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쑤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신정부에서 일자리가 제1 아젠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

-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자리를 통한 성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주도형이며 이로 인해 정책효과가 의문시됨.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생성 및 소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데이터의 속보성,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통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전복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 데이터는 통계청 조사통계의 한계를 가지는 속보성, 대표성을 가지며 타 행정자료에 비해 활용가능성이 높아 이를 활용한 일자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는 주민정보, 사업장정보의 연계로 데이터 활용도 높음

- 주민정보는 경제인구, 취업 및 실업인구, 월평균 소득액, 부부수, 자녀수, 다문화가정, 실업기간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취업자 및 실업자 변화, 경제인구 변화, 소득액 변화, 가구소득, 실업기간 등을 통해 일자리 생성 및 소멸, 가구별 소득 분석을 통한 소득계층별 일자리 분석, 실업기간 분석을 통해 실업자 정책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는 사업장 인원 수, 사업장 취업자수, 사업장 실업자수, 사업장 월평균 소득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정보를 통해 지역산업 현황, 지역고용 현황, 지역 일자리 질 측정 등이 가능하여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에 활용도 높음

■ 국민연금 행정통계의 장점, 한계점 및 활용 가능성

- 국민연금 자료는 가입자의 사업장 자료, 소득자료, 주거지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자료는 업종별로 세분류가 가능하고 주거지역 또한 읍면동 뿐 아니라 소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여 소지역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자료는 지역, 블록, 직장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지역별, 산업별,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다양한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가족자료가 포함되어 사회 및 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와 연계되어 복지분야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 국민연금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블록(아파트단지, 가로세로 100미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 시 시각화가 용이하여 직관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책 활용도가 높아짐
- 그러나, 국민연금 통계가 전수데이터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취업률, 실업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데이터가 작성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가능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표본조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보다는 정확도가 높고 속보성이 확보되어 정책 활용도가 높음

■ 국민연금 데이터로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일자리 이동경로 분석, 전라북도 일자리 모니터 시스템 운영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가 매월단위로 관리되므로 일자리 생성 및 소멸,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 정책 모니터링을 지역에서도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는 매월 사업장 및 개인의 일자리 생성, 소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별로 세분화가 가능하여 특정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일자리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이들 분야의 일자리 생성, 소멸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가 블록D가 주어져 있어 아파트 단위, 또는 가로세로 100미터 단위 지역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기존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이 가능
 - 블록ID별로 실업기간, 연령, 가구원수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지역(아파트 1개동, 가로세로 각 100미터)의 실업자들의 현황 파악 가능
 -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실업자 밀집지역에 실업자 교육 홍보 플랑 설치, 찾아가는 실업자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 종사하던 업종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를 타깃으로 취업연계 교육 가능
- 취업자의 이전업종과 현재업종의 이동량 파악을 통해 재취업, 직업훈련, 창업정책에 활용
 - 기업 퇴사 후 재취업 기간, 업종 등 재취업 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재취업서비스, 창업서비스 등 일자리 정책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 창업자가 동일업종에서 창업을 하는지 아니면 이종업종에서 창업을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창업정책에 활용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활용도 제고 필요

- 국민연금 데이터는 일자리 창출, 소멸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소득, 가구, 사업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현장중심 일자리 정책이 가능하므로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정책 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 예를 들어 실업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업자 정책 홍보가 가능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여 재취업 및 재교육에 대한 찾아가는 행정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과 전라북도가 자료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 국민연금 데이터가 타 기관의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과 전라북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1.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신정부에서 일자리가 제1 아젠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

-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자리를 통한 성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 신정부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시한 내용은 일자리위원회 설치이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 관리할 정도로 일자리 정책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중심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위원회 설치,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청년고용의무할당률 높이고 청년안전망 도입 등), 신중년, 여성 분야 등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
-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부분이 공급주도형이며 이로 인해 정책효과가 의문시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은 샘플수의 한계로 인하여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고 경제총조사의 경우는 속보성이 담보되지 않아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한 단기적 수요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가 필요한 산업, 부문, 지역, 계층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을 기획, 추진하여 일자리 정책 효과가 의문시됨
- 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추진 시스템 필요
 -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 홍보,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행정자료 필요

■ 일자리 정책이 수요기반, 소지역 타기팅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일자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요기반형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정책대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책의 기획 및 수행은 정책효과 극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 대상에 따른 정책의 발굴 및 시행이 되어야 함
 -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며 실업대책은 실업자들을 타기팅 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 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즉, 정책의 전달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마이크로타기팅 행정이 필요함

■ 일자리 생성, 소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스템 마련 필요

-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생성 및 소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생성과 소멸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데이터의 속보성,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통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전환 가능
 - 전북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 데이터는 타 행정자료에 비해 활용가능성이 높아 이를 활용한 일자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2. 국민연금 데이터 관리 현황

■ 국민연금 데이터의 특성

- 국민연금 통계 특성중 하나는 타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관리
 - 국민연금 데이터는 행정자치부 주민전산자료, 대법원 가족관계(변동) 정보 및 법인등기자료, 건강보험공단 재산세자료 및 자동차세자료, 농수산식품부 농지원부자료 및 어선등록자료, 국토해양부 공시지가자료, 지적재산자료 등 타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관리
- 국민연금 통계는 매월 작성되는 전수조사이며 속보성이 확보된 자료
 - 국민연금 데이터는 매월 국민연금 현황 자료가 축적되므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보다 속보성이 확보됨
 - 국민연금 데이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자료가 생성되고 관리가 되므로 전수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어 표본조사에 비해 정확성에서 탁월함

■ 국민연금 데이터의 관리 항목

- 주민정보
 - 주민정보는 경제인구, 취업 및 실업인구, 월평균 소득액, 부부수, 자녀수, 다문화가정, 실업기간 등이 관리되고 있음
 - 취업자 및 실업자 변화, 경제인구 변화, 소득액 변화, 가구소득, 실업기간 등을 통해 일자리 생성 및 소멸, 가구별 소득 분석을 통한 소득계층별 일자리 분석, 실업기간 분석을 통해 실업자 정책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사업장정보
 - 국민연금 데이터는 사업장 인원 수, 사업장 취업자수, 사업장 실업자수, 사업장 월평균 소득액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장 정보를 통해 지역산업 현황, 지역고용 현황, 지역 일자리 질 측정 등이 가능하여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에 활용도 높음

3. 공적연금 현황

■ 군인연금 및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공적연금 가입자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 통계에 잡히지 않음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 또한 모니터링 필요
 - 2015년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2천294만3,646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천156만8천명, 공무원 연금(109만3천명), 사학연금(28만2천명)

-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지방정부 정책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주 대상이 아님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취득자는 일자리정책 대상에서 핵심대상이 아니며 이들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일자리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적연금 가입 현황

[단위: %, 명]

항 목	공적연금가입률	연금가입자수			18~59세추계인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2011	66.3	19,885,911	272,899	1,057,958	32,007,793
2012	67.3	20,329,060	271,415	1,064,472	32,183,166
2013	68.4	20,744,780	276,959	1,072,610	32,315,796
2014	69.4	21,125,135	280,721	1,081,147	32,381,046
2015	70.9	21,568,354	282,467	1,093,038	32,366,649

주: 공적연금 가입률 = (공적연금가입자수 ÷ 만 18~59세 추계인구).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청 추계인구, 각 년도.

■ 국민연금 가입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1년 1천988만4천명에서 2017년 3월 2천175만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담 완화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03
총가입자수	합계	19,884	20,327	20,743	21,123	21,566	21,831	21,756
사업장 가입자	소계	10,976	11,464	11,935	12,309	12,805	13,192	13,201
지역가입자	소계	8,675	8,568	8,514	8,444	8,302	8,060	7,941
임의가입자	소계	171	207	177	202	240	296	313
임의계속가입자	소계	62	88	117	168	219	283	301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 국민연금 행정통계의 장점

- 국민연금 통계는 포괄적 통계로 일자리 정책, 사회 정책에 활용 가능
 - 국민연금 자료는 가입자의 사업장 자료, 소득 자료, 주거지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사업장 자료는 업종별로 세분류가 가능하고 주거지역 또한 읍면동 뿐 아니라 소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어 소지역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연금 통계 특성중 하나는 타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음
 - 국민연금 자료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 관리되고 있어 지역, 블록, 직장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지역별, 산업별,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다양한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자료는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 소지역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 수요자 맞춤형, 이슈 맞춤형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자료는 가족자료가 포함되어 사회 및 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와 연계되어 복지분야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 국민연금 빅 데이터를 시각화 할 경우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함
 - 국민연금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블록(아파트단지, 가로세로 100미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Tableau 프로그램을 활용 시 시각화가 용이하여 직관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책 활용도가 높아짐
- 오랜 데이터 축적으로 장기 시계열 분석 가능
 - 30여년간 시계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한 사회경제변화 설명이 가능하고 미래 예측의 정확성 제고

■ 한계점

- 국민연금 통계가 전수데이터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취업률, 실업률을 파악하는데 한계
 -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제시하기 어려움
 - 임의가입자에 대한 해석,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데이터가 작성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

■ 활용 가능성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가능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표본조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보다는 정확도가 높고 속보성이 확보되어 정책 활용도가 높음
 - 고용 총량 보다는 일자리 생성, 소멸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수립 시 활용가능성 높음

5. 국민연금 데이터로 무엇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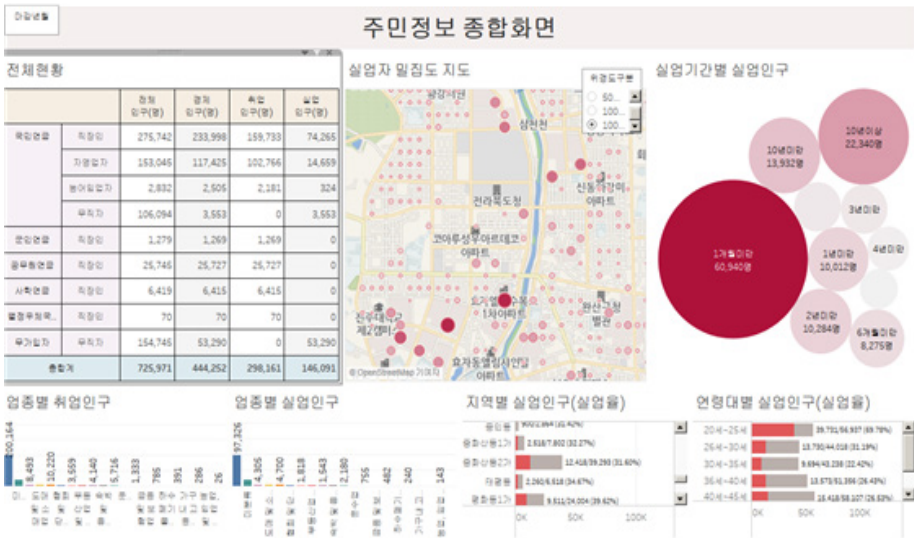
■ 전라북도 일자리 모니터링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가 매월단위로 관리되므로 일자리 생성 및 소멸,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가능
 - 기존 통계청에서 매월 제공 가능한 일자리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나 이는 표본수가 작아(전북 1,600개) 대표성이 부족하고 산업별 세분화가 가능하지 않아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는데 한계
 - 국민연금 데이터는 매월 사업장 및 개인의 일자리 생성, 소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별로 세분화가 가능하여 특정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일자리 정보가 가능함

-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상황판 정책 모니터링을 지역에서도 가능
 -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총량, 산업별 창출과 소멸, 일자리의 질 변화에 대한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에서도 일자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가능

■ 지역별 세부 일자리 모니터링 가능

- 전주지역을 사례로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실업기간별 실업인구를 보면 1개월 미만이 60,940명으로 단기적 이동에 의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마찰적실업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일자리 매칭시스템 개발 필요
 - 실업자 밀집지역을 지도로 볼 수 있어 실업기간과 실업자 수를 파악하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실업자 교육 홍보가 가능함. 예를 들어 효자동 특장이파트에 단기적 실업이 존재할 경우 행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수행할 수 있어 실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지난 1주일동안 1시간 이상을 일하였는지”의 기준은 일자리 총량을 보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한 데이터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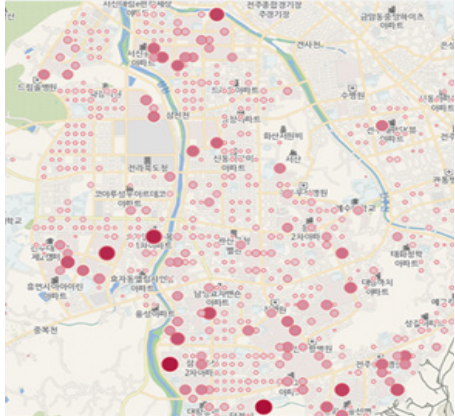


(그림 1) 전북의 주민정보 종합화면 예시(전주)

■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이 가능

- 국민연금 데이터가 블록ID가 주어져 있어 아파트 단위, 또는 가로세로 100미터 단위 지역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기존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세밀한 데이터 제공
 - 기존 통계청에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제공되는 데이터 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가 제공되어 마이크로타기팅이 가능해짐
- 실업자 지원정책에 마이크로 타기팅이 가능
 - 블록ID별로 실업기간, 연령, 가구원수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지역(아파트 1개동, 가로세로 각 100미터)의 실업자들의 현황 파악 가능

-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실업자 밀집지역에 실업자 교육 홍보 플랑 설치, 찾아가는 실업자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 종사하던 업종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를 타깃으로 취업연계 교육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역을 사례로 실업자 밀집지역을 보면 - 실업자 밀집지역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실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홍보, 기획, 추진할 경우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p>〈그림 2〉 전북의 실업자 분포현황 예시(전주)</p>
---	--

■ 일자리 현안 이슈에 즉시 대응 가능

- 일자리 현안문제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통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가능
 - 예를 들어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의 일자리 소멸과 이동을 분석하여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소멸되었는지, 이 일자리로부터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하였는지, 타지역으로 이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p>〈고용 이슈 분석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지역 조선산업 종사자 중 실업자 밀집지역을 보면 - 조선산업 근무 종사자는 대부분 군산 미룡동, 수송동, 나운동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기숙사 거주자는 대부분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 조선산업 경기 악화로 실업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음(예 : 00아파트 10명 종사, 8명 실업) 	 <p>〈그림 3〉 전북 조선업 실업자 밀집지역 예시(군산)</p>
--	---

■ 일자리 이동경로 모니터링 가능

- 취업자의 이전업종과 현재업종의 이동량 파악
 - 기업 퇴사 후 재취업 기간, 업종 등 재취업 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재취업서비스, 창업서비스 등 일자리 정책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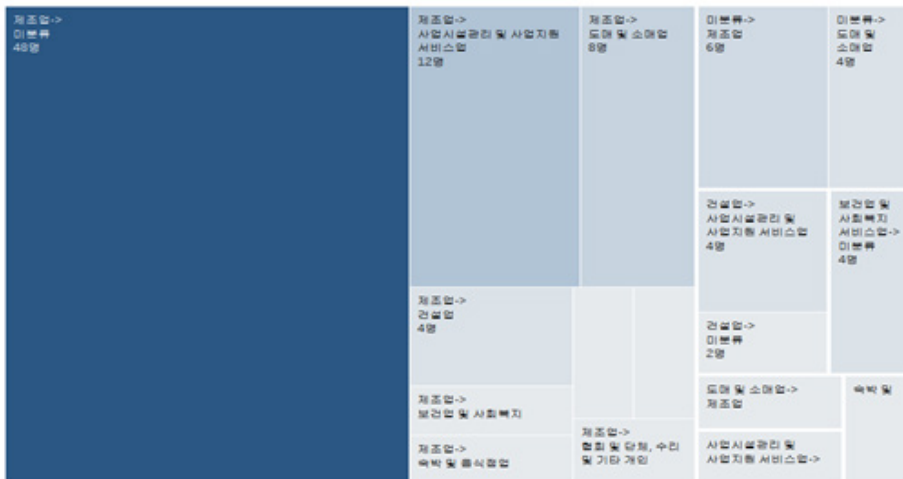
- 또한, 자영업 창업자가 동일업계에서 창업을 하는지 아니면 이종업종에서 창업을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창업정책에 활용 가능

- 취업자의 현재업종과 이전업종을 연계하여 취업자의 재취업 기간 산정을 통해 이들의 경로 및 분야를 분석하여 재취업 활성화 방안,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가능
- 특히, 특정산업을 타깃으로 재취업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며 창업활력지역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 가능

● 익산의 사례를 보면

-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종업원이 미분류 48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명, 도매 및 소매업 8명, 건설업 4명이며 건설업에서 사업지원관리 및 서비스업으로 4명이 재취업 함
- 업종별 이동량 교차분석을 통해 재취업 경로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원 강화 가능



〈그림 4〉 전북 업종별 이동량 교차분석(익산)

■ 그 이외에도 상권분석, 주거 및 교통정책, 복지정책에 활용 가능

● 지역별 이동량 현황 분석을 통해 교통, 주거정책 활용 가능

- 취업자의 이동현황 분석을 통해 출퇴근 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주거정책에 활용이 가능함
-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취업자 파악과 대중교통 정책(카풀 주차장 제공 등)이 가능하고 주거정책에 활용 가능

● 국민연금 자료를 활용한 상권분석 가능

- 국민연금 자료를 활용하여 세분류별로 상권 분석이 가능하여 특정지역에 집중된 업종 및 업종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권분석 및 창업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복지수혜자들의 현황을 시각화 할 수 있어 복지시설의 도입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이들의 거주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들을 타깃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 그러나,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들의 거주지역(셀)을 파악할 수 있어 정책의 효율성 담보 가능
- 창업활력지역, 쇠락지역 등 기업활동의 동태 모니터링 가능

6.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료 뿐 아니라 유관기관 자료 공유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자료에는 국민연금 자료 뿐 아니라 유관기관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전라북도/전북연구원과 MOU체결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으로 활용방안 마련

-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고유 ID를 부여하여 활용하는 방안
 - 국민연금 및 유관기관 데이터에 고유 ID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국민연금공단 내 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외부 전문가가 분석하고 그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속적 연구 협력

- 국민연금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행정통계를 활용한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자료와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한 일자리 통계 관리방안 연구

7. 정책적 제언

- **국민연금 데이터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
 - 국민연금 데이터는 일자리 창출, 소멸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소득, 가구, 사업장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현장중심 일자리 정책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일자리 정책을 현장중심으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 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예를 들어 실업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업자 정책 홍보가 가능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취업 및 재교육에 대한 찾아가는 행정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제약요건을 이전공공기관과 전라북도 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 지역 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과 전라북도가 자료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 국민연금 데이터가 타 기관의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과 전라북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부여 및 데이터센터 운영 등 고려
 - 국민연금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활용도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개별식별번호를 내부적으로 부여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방안
2) 국민연금공단 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외부 기관에서 방문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함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